

연구결과 초청 설명회 자료집 | 2009-6

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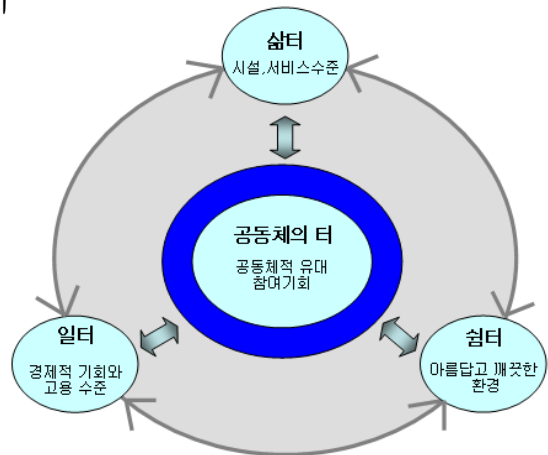
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 재편 방안

한국농촌경제연구원
송미령 연구위원
김정섭 부연구위원
김광선 전문연구원
박주영 전문연구원

1. 농촌의 현실 진단

□ 살기 좋은 농촌이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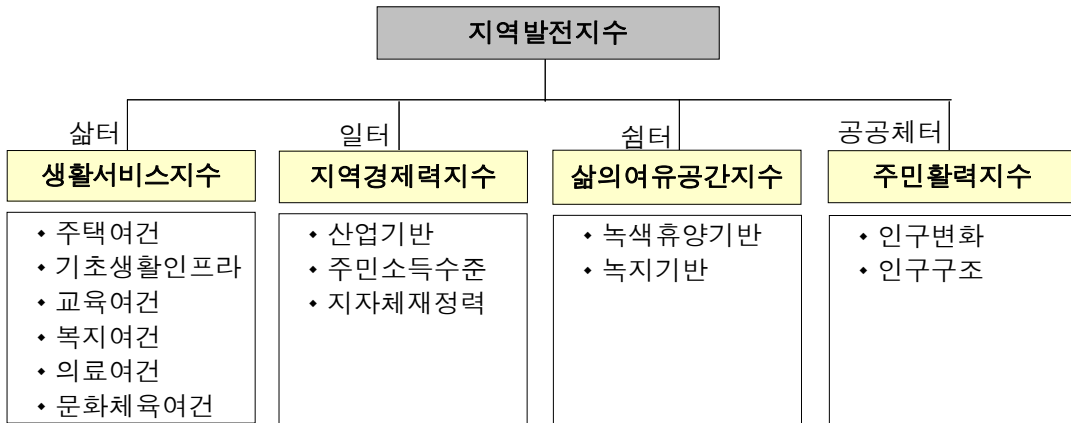
- 정주에 필요한 시설 및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는 삶터,
- 고용기회가 풍부하여 경제적 활력이 있는 일터,
-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과 경관을 보유하고 매력적인 지역자원이 풍부한 쉼터,
- 주민 구성이 건강하고 공동체적 유대와 참여의 기회가 다양한 공동체의 터



□ 우리 농촌은 살기 좋은 곳인가?

- 지역발전지수(RDI)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일반시, 도농복합시, 군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. 원격지 저발전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도출함.
 - 지역발전지수는 4대 영역, 20개 지표로 구성

<지역발전지수 구성>



- 우리의 농촌은 도시·선진국 농촌과 비교하여 아직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없음.
 - 우리 농촌의 여건을 객관적 통계 지표를 통해 도시 및 선진국의 농촌과 비교한 결과, ‘인구감소와 고령화 ↔ 소득기반 취약 ↔ 문화·교육·의료 등 생활여건 부실’ 등 총체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있음을 확인하였음.

<우리 농촌의 비교 평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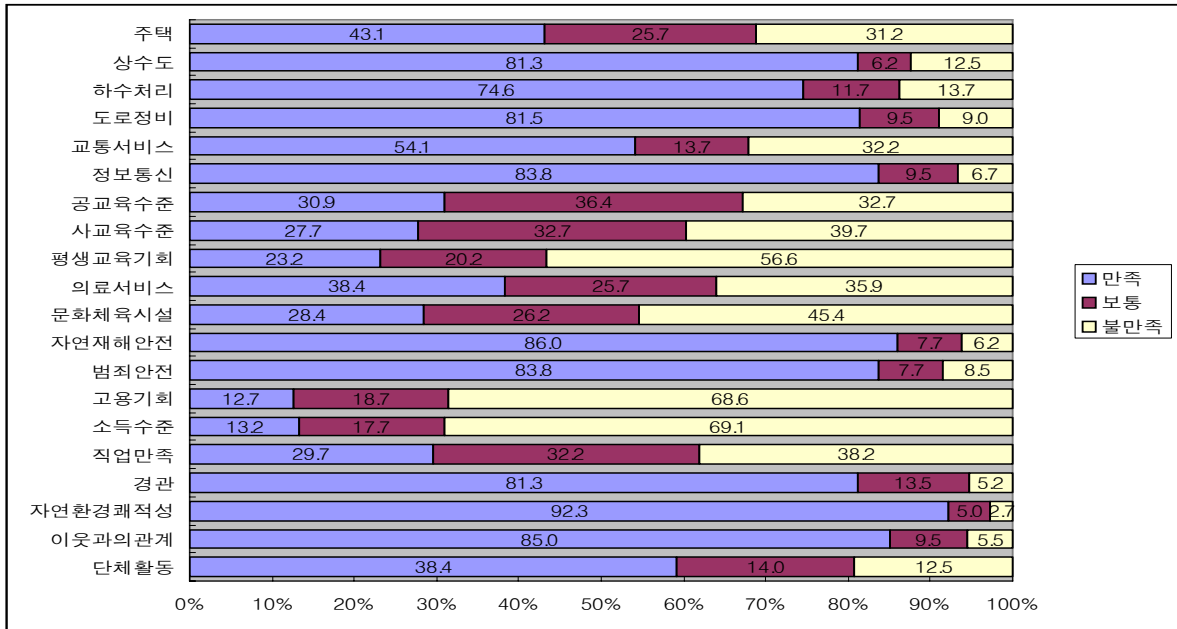
농촌	비교 부문	도시와의 비교		선진국 농촌과의 비교	
삶터	주택 여건	20년 미만 주택비율	도시의 80%	주택의 질	선진국보다 낮음
	의료 여건	인구 1천명 당 의사수	도시의 71%	인구 1천명 당 의료인수	선진국보다 낮음
일터	산업 기반	고용 기회 (일자리수/경제활동인구수)	도시의 115%	2·3차 산업 고용비중	선진국보다 낮음
	소득 수준	1인 당 소득세할주민세	도시의 64%	농가 소득	선진국보다 낮음
쉼터	녹지 기반	녹지율	도시의 129%	녹지율	선진국보다 낮음
공공체터	인구 구조	경제활동인구 비중	도시의 82%	경제활동인구 비중	선진국과 비슷
	교육 수준	대졸학력 이상 인구비중	도시의 46%	대졸학력 이상 인구비중	선진국보다 낮음

주: 선진국은 미국, 영국, 프랑스, 일본을 의미함.

- 농촌 주민은 ‘일터’로서 농촌 여건에 불만족
 - 4개 사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주민족도 조사에서 소득수준(69.1%), 고용기회(68.6%), 평생교육기회(56.6%), 문화체육시설(45.5%) 등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높게 나타남.

- 한편 자연환경쾌적성(92.3%), 자연재해안전(86.0%), 이웃과의 관계(85.0%)에 대한 만족 비율은 대단히 높은 수치를 보임.

< 농촌 주민들의 정주 부문별 만족 비율 >



주: 증평읍, 덕산면, 진안읍, 서하면 주민 4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.

2. 농촌의 미래 전망

□ 농촌 주민의 미래 정책 수요 역시 '일터'로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집중

- 지역 특성에 따라 미래 정책 수요가 다양하였으나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핵심 정책 수요로 나타남.
-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듯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주민의 정책수요는 고용기회 ⇒ 문화·여가·체육시설 ⇒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남. 공무원들은 기업유치·일자리창출, 주민소득증대를 1순위로, 교육·의료·복지서비스, 인구증가를 2순위 정책수요로 응답함.

- 사례지역 네 곳의 주민들이 공통되게 전망하는 미래의 정책 수요
 - 소비자지향적 농업 확산(환경, 식품안전성)을 위한 노력
 - 농촌지역사회의 인적 구성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변화(다문화가정 증가, 여성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)에 대한 대응
- 사례지역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미래의 정책 수요
 - 읍·면의 중심지 기능 변화
 - 교통약자 등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
 - 농촌 학교 수 및 규모 축소에 대한 대응

3. 농촌개발정책 추진 실태

□ 기존 농촌개발정책은 지역 특성 및 주민 정책 수요 변화에 능동적 대처 미흡

- 농촌에 대한 현실 진단, 미래 농촌 전망, 정책 수요 조사 등의 결과는 지역마다 처한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과 함께 지역개발정책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.
- 하지만 기존 농촌지역개발정책은 ①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 치중, ② 마을 단위에 편중된 사업 추진, ③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사업 추진, ④ 지자체의 자율성·창의성 발휘 미흡, ⑤ 지역 주체의 확립과 운영 문제에 대한 고려 부족 등의 한계를 갖고 있음.

□ 지방자치단체 현장 적용 실태

-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이거나 경제적 활력 증대를 위한 세부사업 결정 등에 있어 지역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사업들이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 기여한다고 평가됨.

- 기존 농촌개발정책의 문제점 가운데 특히 단위 사업간 연계 추진 미흡이 주요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. 농촌개발정책의 추진 방식에 있어 유사사업 통·폐합과 사업비의 포괄적 지원을 희망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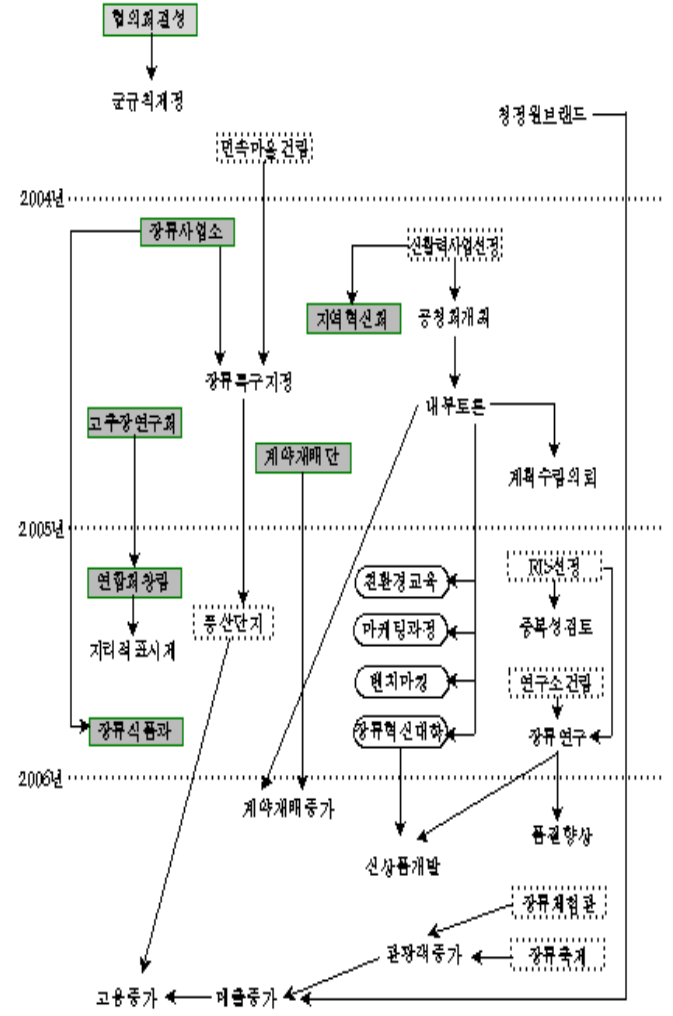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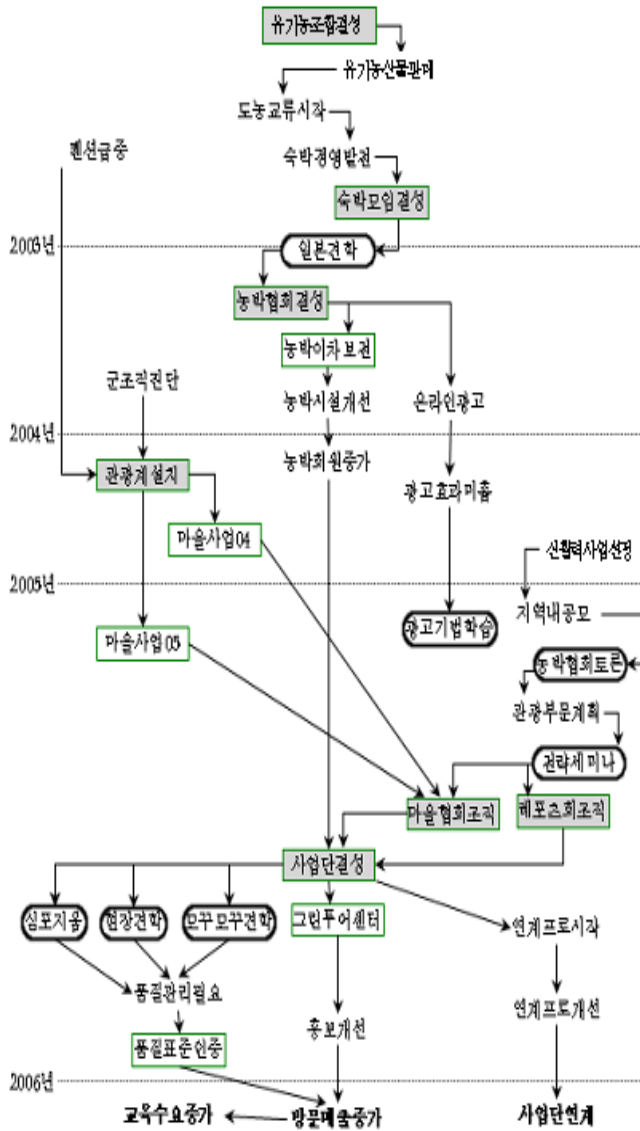
□ 지역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효과를 발휘한 사례 분석

- 신활력사업으로 ‘브랜드체험관광사업’ 및 ‘브랜드명품화사업’을 추진한 평창군과 ‘장류산업육성’을 추진한 순창군의 사업추진과정을 비교하여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.
 - 첫째, 정책의 효율적·효과적 집행을 위하여 먼저 지역개발사업을 총괄 추진할 단일 조직과 민간-공공 부문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필요함.
 - 둘째, 지방의 여건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 기초하여 유연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의 자율적 능력을 신장시켜야 함. 즉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자원이 집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.
 - 셋째, 농촌지역개발 정책 참여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입은 ‘하향적인 교육 프로그램’이 아닌 ‘자발적인 학습조직 결성’ 방식을 채택해야 함.

평창군: 브랜드체험관광사업

vs

순창군: 장류산업육성



4.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를 위한 정책재편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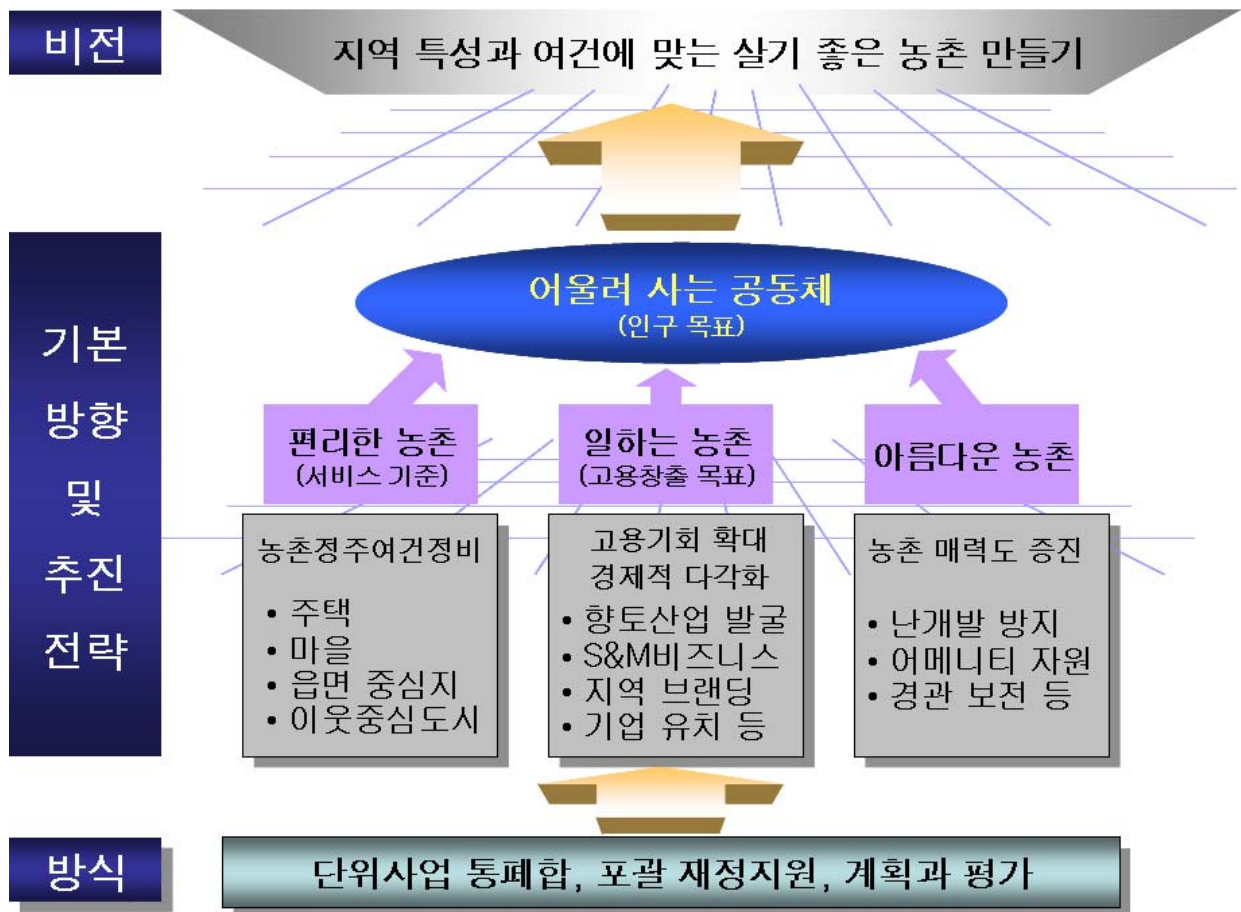
- 정책의 목표 설정
 -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
- 정책의 핵심 내용 전환
 -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주력

- 마을 수준을 넘어서는 고차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
- 농촌다움의 자원 발굴과 활용
- 지역의 역량 강화 도모

○ 정책의 추진 방식

- 농촌지역 재정의와 유형에 따른 차별적 접근
- 중앙정부 부처별 소규모 유사사업 통합 및 정책균화
- 지역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한 포괄적 재정지원 방식 도입
- 농촌계획제도 도입 및 평가체계 확립과 관련 법제도 정비
-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주체의 역할 정립과 역량 강화

< 농촌개발정책의 비전과 전략 >



< 주요 연구 결과 요약 >

